

보도 시점 2026. 8. 12.(수) 11:00 배포 2026. 8. 12.(수) 10:00
(브리핑 09:20)

취임 2년차 임광현 국세청장,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정 실천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

- 8.12.(수) '26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공유
-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 중점 논의
- 국세청 최초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탁월한 성과 9건에 대해 약 1억원 포상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8.12.(수)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 역시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행정’이라는 의미를 이어나갔다.
- ‘튼튼한 재정·공정한 세정,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을 주제로, 7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하반기 추진과제를 전국 관서장에게 전달하고,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하였다.
- 한편,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최대 3천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국세청 최초로 거행, 탁월한 성과 9건에 약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조성하였다.
- 특히, 적극적인 해외 정보교환 요청을 통해 비거주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국가 간 징수공조 노력을 통해 체납액 수백억원을 징수한 사례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당팀에 총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금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튼튼한 국가재정으로 뒷받침한다.

- '26.6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18.6조원(세입예산 406.9조원, 진도율 53.7%)으로 전년 동기대비 32.8조원 증가하였으며, 하반기 주요 세목* 성실신고 지원 확대와 치밀한 세원관리, 체납관리단 운영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중장기 재정기반을 탄탄히 구축한다.

* 부가세 예정신고(10월), 법인세(8월)·종합소득세(11월)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12월) 등

- 미리·모두채움 확대*,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 추진,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세금신고 안내·교육 서비스」 강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해외신탁 미신고 등 탈루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한다.

* (예) 물건소재지·양도일 등 양도세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입주권·분양권 등 기타자산까지 확대

** 납세자 동의하에 국세청이 작성한 모두채움 신고서로 자동 신고되는 '모두채움 자동신고제' 등 개발('27년~)

□ 둘째,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의 도약,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

- '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목표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내 통과를 위해 관련 입법절차를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 체납된 국세외수입 징수권한 국세청 일원화, 과세정보 활용, 효율적 징수수단 등 규정

- 기관별 국세외수입 체납정보 수보* 및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을 통해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27년~)

* 경찰청, 공정위, 성평등부, 산림청 등 23개 부처와 업무협약 체결('26.8월초 기준)

- 한편 국민 접점이 가장 넓은 납세서비스 분야를 시작으로 국세행정 쏠 분야에 AI 전환을 확대하여 '공공 AI 선도모델'을 구현해 나간다.

* ('26.下) 핵심기반 구축 → ('27) 본사업 착수 → ('28) 핵심과제 개통 등 전 분야 확산

- 특히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개통을 시작으로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는 한편, 과거 조사사례·노하우 등을 수집하여 고도화된 빅데이터 기술과 AI 알고리즘을 결합한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설계하는 등 공정과세 분야의 AI 혁신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고히 세우는 공정 세정을 실현한다.

- 올 하반기 총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실태를 확인한다.
- 현재 체납관리단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 3,000명)이 '26.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0월부터 활동 예정인 2차 체납관리단 4,000명 채용에 약 18,800명이 지원, 경쟁률 4.7:1을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26.9월)되고 있다.
-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소액체납자)과 현장방문(고액체납·방문회피자) 등 맞춤형 실태확인을 통해 체납자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최적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 ▶ (일시적 납부곤란) 즉시 납부안내 또는 분납 안내 및 분납 사후관리 실시
- ▶ (고의적 납부기피) 전담부서에서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추적조사 등 엄정 대응
- ▶ (생계곤란형 체납) 납부의무소멸 신속 추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26.7월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명(체납액 1.1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에 착수하였으며, 9월 이후 타 기관 국세외수입 체납*으로 실태확인 범위를 확대한다.

* 노동부 임금채권대지급금, 기후부 환경개선부담금, 공정위 과징금 등

- ❶다주택 중과세 회피를 위한 저가양도, 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 ❷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누르기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❸초고가주택·슈퍼카 등 법인자산 사적사용, ❹서민 대상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행위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탈세행위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 ❶ 부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한자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 매매로 위장한 사실상 증여 등
- ❷ 허위공시·외형 부풀리기로 시세조종 후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양도차익 은닉
- ❸ 지방 소재 법인이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 취득 후 사주에게 무상임대 관련비용을 법인비용 처리
- ❹ 청년·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업자, Si허위·부당광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온라인업체 등

- 또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추징하고, 자산은닉 가능성이 큰 국가와의 전략적 정보교환, 징수공조 확대로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한다.
- 특히 국세청 최초로, 서울청 조사4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 부서에 지능적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 탈루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 개요 >

- ▶ (구성) 서울청 조사4국 및 중부청 조사3국 각 1개팀 설치 등
- ▶ (역할) 주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탈루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
- ▶ (기대효과)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강화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탈세를 엄단하고, 은닉재산을 포착하여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 → 조세정의 구현

- 고액·상습체납자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에 대해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지자체·관세청 등과의 합동수색,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와 공매처분 강화 등 엄정 대응한다.
-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에 맞추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 추가 도입, AI를 활용한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등 탈세 방지 인프라를 강화한다.

* (26년 세제개편안) 포상금 지급 최저 징수금액 5천만원 → 3천만원 지급률 5~20% → 10~30%

□ 넷째,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한다.

- 우선,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 (부가세) 고환율 피해, 창업청년 등 103만명, (법인세) 고환율·고유가 피해 등 4만개 법인

- 청년층 자립지원을 위해 고용(체납관리단 채용) - 창업(「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 재기(학자금·체납 부담 완화) 등 생애주기별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 ▶ (고용) 10월 체납관리단 채용(4천명)을 통해 ‘쉬었음 청년’에 대한 생산적 일자리 확대
- ▶ (창업) 청년 창업자 대상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시행(공제·감면 컨설팅, 신고일정 안내 등)
- ▶ (재기) ①실(퇴)직 청년 학자금 상환유예 절차 간소화 및 ②폐업 청년 체납액 납부부담 완화

-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세정차원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 아울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교역국(일·베·인도) 및 신흥국(멕시코·카자흐)과의 세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반도체·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이중과세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해외 투자전략과 세무이슈 대응을 함께 안내하는 「해외진출 원스톱 전략데이(안)**」를 새롭게 개최한다.

*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르헨티나와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 현지 진출기업에 필요한 상담·지원을 제공하고 이중과세 발생시 과세당국과 적극 협의

**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이 코트라와 함께 전국 주요 거점도시 순회 강연

- 한편, 소득변동으로 새롭게 장려금 수급 대상이 되는 저소득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자금 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상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복지세정을 실천한다.

* (26년 세제개편안) ①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②종합소득 기본공제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 ③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포함 취약계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지속 발굴·건의

- 마지막으로, 업무 몰입을 유도하는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 체납관리 분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한 직원이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우수인력 수시승진을 실시하고, 탁월한 성과에는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한다.

* '26.8월 해외은닉재산 환수, 역외탈세 추징 등 주요 성과 9건 9,500만원 지급(최고 2,000만원)

- 또한, 특이민원에 대응하는 「직원보호 변호팀」을 통해 현장 직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민원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등 일할 맛 나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국세행정 혁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여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선주 (044-204-2301)
		담당자	사무관	김석우 (044-204-2302)

참고 1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포상내역

구분	수상자	성과
대상 (2천만원)	이효진 국세조사관 (서울청 징세) 외 1명	■ 해외 은닉재산 추적, 국가 간 징수공조를 통해 비거주자 체납액 징수 - 국내 체납법인의 외국인 대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적극적인 정보교환과 긴밀한 징수공조로 406억원이라는 이례적인 규모 체납액 징수
	김다솜 국세조사관 (서울청 조사4) 외 2명	■ 글로벌 사모펀드의 역외탈세 적발로 조세정의 실현 - 사주의 지능적 역외탈세를 적발하고, 펀드 구조를 악용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과소납부를 전방위로 추적하는 등 658억원의 국고 확보
최우수 (1,5천만원)	정영화 국세조사관 (국세청 징세법무) 외 3명	■ 국민 참여 체납관리 혁신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기틀 마련 -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국민과 함께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틀 마련(법령 개정부터 예산 편성, 조직 신설 등)
우수 (1천만원)	김재현 국세조사관 (서울청 조사4) 외 3명	■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조사 및 서민부담 가중시킨 물가상승조장 탈세 척결 -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주식 법인세 213억원을 추징하고, 관련자 전원(실행위자4명, 법인3개 업체) 조세포탈 고발 등
	황병광 국세조사관 (남양주 세무서)	■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체납에 대해 새로운 징수 논리 개발로 추가징수 기반 마련 - 체납자 신탁재산이 금전(유보금)만 있는 경우에도, 신탁회사를 상대로 부가세 물적납세의무 지정 후 추심 가능하다는 체납기법을 연구하여 192억원 징수, 종합부동산세로 적용 확대(세법개정)
	홍미라 국세조사관 (서울청 성실납세)	■ 新유형 고액 기획성 경정청구 성공적 대응으로 부당환급 방지 -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대규모의 신유형 기획성 경정청구에 대해 최종 대법원 국승 결과를 이끌어 내어 1,000억원 이상의 부당환급 방지에 기여
장려 (5백만원)	김혜영 국세조사관 (서울청 국제거래) 외 2명	■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신종탈세 적발로 공정과세 구현 - 가상자산 거래소의 변칙송금 구조를 집요하게 추적조사하여, 우회 송금된 자금의 최종 귀속을 규명하는 등 전방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26억원 추징
	송재중 국세조사관 (순천 세무서)	■ 범칙행위로 발생한 법인체납에 책임있는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최초 적용 - 국세청 최초로 민·상법상 존재하는 배상책임 규정에 조세채권을 대입하여 소 제기(손해배상) 및 승소함으로써 법인의 체납과 범칙행위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범칙 행위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 제시
	서형렬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외 3명	■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운영을 통한 직원 보호 체계 구축 - 직원보호 변호팀을 최초로 출범, 전국에서 발생한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위법 민원·부당민원·직원 피소사건에 대해 법률지원하여 기관차원 직원보호 체계마련

참고 2

성실신고 지원 확대로 자진납부 세수 극대화

성실신고 지원 확대로 자진납부 세수 극대화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양도소득세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입주권·분양권 등 **기타자산까지**
물건 소재지·양도일 등
미리채움

영세 납세자를 위한 새로운 소득세 신고체계 구축

종합소득세

납세자 동의하에
국세청이 작성한 모두채움
신고서로 자동 신고되는
'모두채움 자동신고제'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세금신고 안내·교육 서비스

홈택스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비수도권 중심 확대

'25년 79개 서 >>> '26년 87개 서

참고 3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실태확인 실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실태확인 실시



실태확인 본격운영

7월 실태확인 착수

- 체납관리단 3,000명이 실태확인 시작
-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부터 실태확인 착수
→ 납부안내 및 복지 연계 실시

9월 실태확인 순차적 확대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대지급금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등

2차 체납관리단 채용

7월

- 2차 체납관리단 4,000명 채용진행
→ 18,856명 신청접수 (경쟁률 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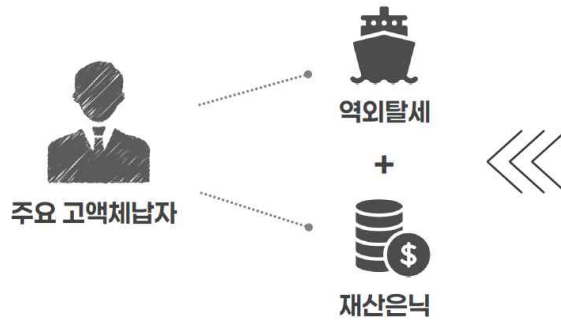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주요 채용일정

채용공고	서류합격	면접심사	최종합격
7.21~29	8.14	8.24~31	9.15

주요 고액체납자 조사·체납 통합 집행(안)



해외 관계사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주요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추적·세무조사 통합수행



조사 4국 등 특별전담팀 통합수행

- ① 역외정보 수집·탈루혐의 분석
- ②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재산추적조사 연계)
- ③ 비정기 세무조사

주요 과제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중점 추진과제 ① : 성공적 국정운영을 든든한 재정으로 뒷받침			
■ 세수관리	징세과	이주연 과장 백지선 사무관	044-204-3001 3002
■ 신고편의 제고	부가가치세과	이인섭 과장 노태천 사무관	044-204-3201 3212
	소득세과	손채령 과장 김주강 사무관	044-204-3241 3252
	부동산납세과	오은정 과장 허재호 사무관	044-204-3401 3412
■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부가가치세과	이인섭 과장 김종현 사무관	044-204-3201 3217
	원천세과	김태수 과장 홍성훈 서기관	044-204-3341 3342
■ 신고 사후검증 강화	부가가치세과	이인섭 과장 노태천 사무관	044-204-3201 3212
	소득세과	손채령 과장 김주강 사무관 민훈기 사무관	044-204-3241 3252 3257
	법인세과	신재봉 과장 박수영 사무관 김영동 사무관	044-204-3301 3312 3322
■ 국제거래 취약분야 점검	국제세원담당관	이임동 과장 박진우 사무관	044-204-2801 2802
중점 추진과제 ② :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혁신 세정			
■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국세외수입 징수기획과	박성무 과장 김유학 사무관	02-760-9161 9162
■ 국세외수입 통합기반 구축	국세외수입 징수기획과	박성무 과장 김유학 사무관	02-760-9161 9162
	국세외수입 징수관리1팀	천주석 과장 양용환 사무관	044-204-4001 4002
	국세외수입 징수관리2팀	안혜정 과장 박선희 사무관	02-760-9171 9172
■ AI 세정혁신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우연희 과장 심은진 사무관	044-204-4401 4402

주요 과제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 AI 보안체계 확립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우연희 과장 심은진 사무관 양동훈 사무관	044-204-4401 4402 4412
	정보보호담당관	손유승 과장 김동윤 사무관	044-204-4921 4952
중점 추진과제 ③ : 조세정의를 확고히 세우는 공정 세정			
■ 1만명 체납관리단 운영	체납분석과	이용선 과장 임정미 세무주사	044-204-3041 3047
	국세외수입 징수관리1팀	천주석 과장 양용환 사무관	044-204-4001 4002
■ 부동산 탈세 근절	부동산납세과	오은정 과장 양창호 사무관	044-204-3401 3417
	상속증여세과	김선주 과장 문서영 사무관 송태준 사무관	044-204-3441 3452 3457
■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엄단	조사1과	구성진 과장 최일암 사무관	044-204-3551 3552
■ 법인자금 사적유용 근절	법인세과	신재봉 과장 박수영 사무관 김영동 사무관 문태형 사무관	044-204-3301 3312 3322 3327
	조사2과	장성기 과장 손태빈 사무관	044-204-3601 3602
■ 민생침해 탈세 척결	조사2과	장성기 과장 손태빈 사무관	044-204-3601 3602
■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	국제조사과	김태형 과장 조홍기 사무관	044-204-3651 3652
■ 조사-체납 연계 강화	체납분석과	이용선 과장 성기원 서기관	044-204-3041 3057
	조사기획과	박상준 과장 강재원 사무관	044-204-3501 3522
■ 해외공조 확대	역외정보담당관	송윤정 과장 박옥련 사무관	044-204-2901 02-2114-5292
■ 추적조사 강화	체납분석과	이용선 과장 성기원 서기관	044-204-3041 3057

주요 과제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 민사소송 활성화	채납분석과	이용선 과장 성기원 서기관	044-204-3041 3057
■ 압류자산 적극 공매	징세과	이주연 과장 신지명 사무관	044-204-3001 3012
■ 탈세제보 수집 활성화	세원정보과	김태훈 과장 최장원 서기관	044-204-3701 3712
■ 포렌식 인프라 고도화	과학조사담당관	이법진 담당관 김묘성 사무관 배인순 사무관	02-2114-2700 2722 3052
■ 가상자산 탈세대응	과학조사담당관	이법진 담당관 임민철 사무관	02-2114-2700 2782

중점 추진과제 ④ : 상생성장을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과	이인섭 과장 노태천 사무관	044-204-3201 3212
	법인세과	신재봉 과장 박수영 사무관	044-204-3301 3312
■ 환급금 신속 지급	부가가치세과	이인섭 과장 노태천 사무관	044-204-3201 3212
	소득세과	손채령 과장 김주강 사무관	044-204-3241 3252
■ 소상공인 및 정부포상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조사기획과	박상준 과장 정성한 사무관	044-204-3501 3517
■ 국세외 채납관리단 채용	국세외수입 징수관리1팀	천주석 과장 양용환 사무관	044-204-4001 4002
■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국세데이터담당관	정필규 과장 김미나 사무관	044-204-2361 2362
■ 학자금 상환유예 간소화	학자금상환과	홍철수 과장 김석제 사무관	044-204-3871 3872
■ 생계형 채납자 지원	채납분석과	이용선 과장 정영순 사무관	044-204-3041 3052
■ 지방 이전기업 지원	법인세과	신재봉 과장 김영동 사무관	044-204-3301 3322
■ 지방소재 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 확대	조사기획과	박상준 과장 정성한 사무관	044-204-3501 3517

주요 과제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 장려금 지급 내실화	장려세제과	정상수 과장 송지원 사무관 선희숙 사무관 이주영 사무관	044-204-3801 3812 3817 3827
■ 전국민 고용보험 뒷받침	소득자료관리과	정해동 과장 김명제 사무관	044-204-3841 3852
■ 학자금 상환 지원	학자금상환과	홍철수 과장 김석제 사무관	044-204-3871 3872
■ 해외진출 지원	국제세원담당관	이임동 과장 강새롬 사무관	044-204-2801 2817
■ 현지지원 강화	국제협력담당관	이상훈 과장 김성웅 사무관 김미애 사무관	044-204-2861 2872 2877
■ 양자교류 다변화	국제협력담당관	이상훈 과장 김시우 사무관	044-204-2861 2862
■ 이중과세 방지	상호합의담당관	이슬 과장 안광원 사무관	044-204-2961 2962

추진기반 ① : 업무 몰입을 유도하는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립

■ 성과기반 인사	인사기획과	이상원 과장 정진욱 사무관	044-204-2240 2252
■ 성과포상금제 운영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과장 이홍구 사무관	044-204-2301 2322
■ 비생산적 일 줄이기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과장 이홍구 사무관	044-204-2301 2322

추진기반 ② :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

■ 직원보호 변호팀	감찰담당관	정동주 과장 서형렬 사무관	044-204-2651 5802
■ 직원복지 확대	운영지원과	최원수 과장 채정훈 서기관	044-204-2260 2272
■ 갑질행위 근절	감찰담당관	정동주 과장 남무정 사무관	044-204-2651 2662
■ 사적이해관계 사전검증 시스템	감찰담당관	정동주 과장 박종성 사무관	044-204-2651 2692